

헌 법(2003.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에서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0점)

- 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의 원칙, 그리고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준으로 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나. 위 법률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되, 고정명부식 1인 2표제와 가변명부식(또는 자유명부식) 1인 2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헌법적 평가를 하시오. 동시에 이른바 봉쇄조항 또는 저지조항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1인 1표제의 다수대표제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헌법상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제 2 문.

《제2문의 1》

의무전투경찰순경 甲은 서울○○경찰서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乙의 권총오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甲의 유가족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가배상청구권이 침해되었다. 둘째,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헌법규정이다. 甲의 유가족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헌법적 평가를 하시오. (30점)

《제2문의 2》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점)

- 1) 불합치결정의 주문이 채택되는 사안
- 2) 불합치결정된 법률의 효력
- 3) 불합치결정된 법률의 계속 적용 여부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행정법(2003.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은 여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군수 乙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乙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 가. 乙이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甲이 강구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구제방법은?
- 나. 위 승소판결 확정 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위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乙은 이에 의거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다. 만일 위 나.항의 개정법령에서 당해 개정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의 효력은?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하여 2월의 영업 정지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甲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2회 이상의 법규위반에 대한 가중적 제재규정이 있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25점)

《제2문의 2》

도로사용에 있어 인접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상 법(2003.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한다)는 액면가 1만원인 주식 1만주를 발행하여 2002. 6. 15. 설립된 납입자본금 1억원, 수권자본금 2억원인 회사이다.

A회사 주주 甲은 2003. 3. 2.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3천주 전부를 乙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주식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를 받아 A회사 대표이사 丙에게 통지하였으나 乙명의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甲은 2003. 3. 22. 이러한 명의개서미필 상태를 이용하여 乙에게 양도한 주식 3천주를 丁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A회사는 같은 날 위 주식 3천주에 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丁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A회사는 2003. 5. 4. 무상신주(無償新株) 5천주를 발행하면서 그 중 1,500주를 丁에게 배정하고 주주명의를 丁으로 등재하였다. A회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위 양도주식 3천주와 신주 1,500주의 귀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50점)

제 2 문.

《제2문의 1》

보험약관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라는 면책사유를 두고 있다면, 보험자는 이러한 인위적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언제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는가? (25점)

《제2문의 2》

대리상 계약이 종료된 후의 대리상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시오. (25점)

확 인 : 법 조 인 력 정 책 과 장

민 법(2003.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A는 B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B에게 자기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A는 그 상태에서 위 주택을 C에게 보증금 1억원, 차임 월 200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위 주택을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이를 C의 부담으로 하기로 약정한 다음, C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하고 위 주택을 C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A는 위 주택을 D에게 5억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 지급에 관하여는 D가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하고 C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 채권·채무관계도 인수하기로 하여 (이에 대하여는 C도 동의하였다), 실제로는 A에게 3억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위 약정에 따라 A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C는 그 이후의 차임을 D에게 계속 지급하였다.

C는 위 임대차기간 중 위 주택의 사용에 문제가 생기자 주택수리업자인 E에게 그 수리를 맡겼는데 E가 위 주택을 수리하던 중 그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주택이 멸실되었다.

이 경우 A, B, C, D, E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50점)

제 2 문. 다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제2문의 1》

상계의 요건

(30점)

《제2문의 2》

A 소유 금전의 점유를 B가 침탈한 경우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20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민사소송법(2003.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은 해외근무차 출국하면서 친구인 乙에게 자신의 재산관리를 부탁하였다. 乙은 甲을 위하여 5년 간이나 재산관리를 하였음에도 甲이 당초의 약속과 달리 별다른 보답을 하지 아니하자 재산관리에 대한 보수라고 생각하여 甲의 승낙 없이 甲 소유의 아파트를 乙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귀국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에게 수고한 대가를 정산하여 금전으로 지급하겠으니 아파트는 돌려 달라며 2003. 3. 15.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03. 4. 1.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乙은 집에서 “甲의 승낙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면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만을 기재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동네 우체통에 넣었고, 이 답변서는 2003. 4. 10. 법원에 접수되었다. 乙은 그 이후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다음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50점)

- 가. 법원은 위 사건을 바로 이 상태에서 종결할 수 있는가?
- 나. 법원이 이 소송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乙에게 기일통지서를 보냈음에도 乙이 불출석하였다면, 법원은 乙이 甲의 청구를 인낙하였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가?
- 다. 위 사안에서 만일 甲의 소 제기 전에 乙이 사망하여 甲이 乙의 상속인인 丙,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丙은 위 사안에서의 乙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丁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고 다투었다면, 丙의 답변 내용은 丁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 라. 위 사안과 달리, 乙은 임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 A로부터 적법하게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A에 대한 대리권수여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법원으로서는

어떤 내용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가?

제 2 문.

《제2문의 1》

우리 민사소송법이 적시제출주의(適時提出主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여러 방안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30점)

《제2문의 2》

乙은 甲 소유의 토지를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甲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왔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乙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건물매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인 甲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라도 건물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가? (20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형 법(2003.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은 야간에 乙의 집에 들어가 乙을 죽이고 돈을 빼앗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막상 계획한 범행시각이 다가오자 甲은 용기가 나지 않아 술을 마셨다. 甲은 만취한 상태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야간에 乙의 집에 침입하여 乙의 머리를 몽둥이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乙이 쓰러져 축 늘어지자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甲은 곧이어 乙의 집 장롱 속에서 1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꺼내 가졌다. 그런 다음 甲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乙의 집에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해 乙의 집은 전부 타버렸다. 그리고 乙은 甲의 몽둥이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甲의 방화로 발생한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5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乙로부터 고가의 의료기기 한 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물건을 보관하던 중, 중개상 丙으로부터 매수인을 소개해 줄테니 판매대금에 대하여 乙을 속이고 그 대금의 일부를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았다. 甲은 이를 수락하였고, 丙의 소개로 그 의료기기를 丁에게 1억 원을 받고 팔았다. 甲은 丙과 모의한 대로 乙에게 판매대금으로 8천만 원만 건네주었다. 그리고 甲과 丙은 남은 판매대금 2천만 원을 각각 반씩 나누어 가졌다.

甲과 丙의 죄책은? (30점)

《제2문의 2》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유예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해석이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20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형사소송법(2003.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관 A는 수개월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해결에 진척이 없던 차에, 그 살인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자처하면서 경찰서에 자진출두한 甲으로부터 사건의 목격상황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甲의 진술에 전후모순이 있다고 생각한 A는 甲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주거가 부정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농후하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하였다. A는 甲에 대해 철야신문을 하면서 계속 범행을 자백할 것을 추궁한 끝에 신문 시작 후 40여시간만에 결국 甲으로부터 자신이 살인을 하였다는 자백을 받아내었다. A는 甲의 자백에 근거하여 甲이 경찰서에 올 때 타고 와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에서 등산용 칼을 찾아내어 증거물로 압수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 B의 신문을 받게 된 甲은 체념한 상태에서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B는 甲을 살인죄로 기소하고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한 등산용 칼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甲은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50점)

가. 체포시부터 제1심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甲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모두 설명하시오.

나. 제1심 법원은 甲에 대해 어떤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

제 2 문.

《제2문의 1》

피고인은 A에 대한 절도죄(이하 A죄라 한다)와 B에 대한 절도죄(이하 B죄라 한다)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결과 항소심에서 A죄에 대하여 유죄, B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A죄에 대한 심리결과 피고인에 대한 전과를 고려할 때 상습성이 인정되어 A죄와 B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B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는가?

(30점)

《제2문의 2》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과 공판단계에서의 증인의 지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학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